데스크시각

최재호

비상벨은 이미 울렸다

세계경제가 지난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럽발 재정위기,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긴축재정 등 우리의 경제환경은 어느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인다.

국내 소비자심리지수(CSI)도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10대 투자은행(IB)들이 예상하는 올 한국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6월 3.3%였으나 최근 3.2%로 떨어졌다. 대내외 경기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초유의 위기에 따른 비상경영"을 선언했고, 그룹 총수들은 손수 나서 대응을 독려하고 있다.

비틀대는 지역경제

지금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상황이다. 실물·금융·자본시장이 모두 엉망이고, 모든 경제지표가 비틀거리고 있다. 여건이 극히 취약한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

부임해오는 광주지방국세청장들은 취임 일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말한다. 하지만 세수를 거둘 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웃지 못 할 농담마저 회자된다.

건설시장은 아예 빈사 지경이고, 유통가도 죽을 맛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 5월 매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에 그쳤고, 광주신세계는 3.4% 하락, 광주지역 이마트 5개 점 역시 11.2%의 역신장을 했다.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울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하투(夏鬪)마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난달 말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가 다행히 5일 만에 모두 복귀했지만 현대차 등 금속노조를 비롯한 대형 사업장의 올 여름 파업투쟁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노동계의 투쟁이 올 유난히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연말 대선 때문이다. 노동단체들과 이익집단들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이 가까워지면 이런 요구는 더욱 봇물을 이룰 테고, 그 행태도 과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하투가 유난히 걱정되는 이유다.

화물·건설노조가 일단락되니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등 지역 대표 사업장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거나 수순을 밟고 있어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기아자동차는 2년 연속 무분규로 수출과 내수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62만대 증설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쟁점사항으로 등장해 사측과 노조의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노사갈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 1분기 매출이 1조5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3% 신장을 이뤘고, 영업이익은 783억 원으로 61.0%, 당기순이익은 86억 원으로 226.7%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가 지속되면 내년 상반기 워크아웃 조기졸업 가능성도 크다.

이 두 사업장은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중추다. 협력업체와 골목상권까지 연계돼 있어 파업에 들어가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그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노사간의 양보와 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다.

정치적 파업은 안 된다

기업은 정체해 있으면 망하게 돼 있다. 고객들은 한 푼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사려하고, 투자자들은 배당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 한다. 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를, 종업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끊임없이 내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며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는 생존투쟁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전남은 전기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이 성한 곳 없으며, 고용 효과가 큰 건설산업은 아예 빈사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의 파업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역경제계의 목소리도 그 심각성에 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영리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적극적인 종이 결국 생존한다"는 찰스 다윈의 말을 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 노사가 곱씹어 봐야 한다.

"비상벨은 이미 울렸다!"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사설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시켜야

UN이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직접 중재에 나선다고 한다. UN의 중재가 성사돼 국제스포츠 사상 최초로 단일팀이 구성된다면 광주U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 아닐 수 없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UN산하 UNOSDP(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가 남북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을 U대회 조직위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운태 시장과 윌프리드 렘케 UN 스포츠특별보좌관이 10일 광주시청에서 'U대회 공동 프로젝트 협약식'을 갖고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중재와 지원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UN이 직접 나섰다는 데 의미가 크다.

조직위는 UN의 중재 아래 2015년까지 정기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실시, U대회에서 탁구와 태권도 등 최소한 2개 종목 이상의 단일팀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축구와 탁구 등 단일종목에서는 단일팀이 구성된 적이 있으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종합 국제대회에선 구성된 전례가 없었다.

또 지난해에는 단일팀 구성의 법적 토대가 될 '광주U대회 지원특별법'이 마련됐다. 특히 연말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현 정권보다는 훨씬 진전된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있어 여건상 그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광주U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한다면 이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 이래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남북 간에 단일팀이 구성될 경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광주U대회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성공개최 또한 자명한 일이다.

광주U대회가 한국 스포츠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UN과 광주시, 조직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추락하는 광주·전남교육 두고만 볼 건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기록했다. '종합등급'에서 광주는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 '매우 미흡'으로, 전남은 '보통'에서 '미흡'으로 밀린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16개 시·도 교육청의 지난해 학교 역량강화,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의 성과와 정책을 등급으로 매겨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나눈 평가에서 이 지역 교육청은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광주가 지난해 '우수'에서 두 단계 낮은 '미흡'으로, 전남이 전년과 같은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 그만큼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이는 광주 일반계 고교 수능 1등급 비율이 7년 연속 최상위라는 '실력 광주'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선 전국 교육감 가운데 진보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6개 교육청의 등급이 대체로 낮아 '정치적' 의혹을 떨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교과부가 이번 평가를 기준으로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점이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종합등급이 낮은 만큼 교부금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평가 방법·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도마에 오른 사안들만 종합하더라도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정책에 변화와 개혁은 필요하나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율학습 등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은펜칼럼

한일군사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배상 나서라

김병인

일본 극우 삼류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 말뚝을 박은 사건이 나 온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 처리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일본은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자유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공개적으로 걷는데 우리의 군사 정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부를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야심은 오래된 일이다. 전후에 미군의 영향 하에 있을 때는 피점령국 국민으로 일정 정도 미군의 통제를 받았지만, 1955~1973년까지 연평균 10% 정도 성장을 하는 등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자 오만해지기 시작했다. 1968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미국, 소련에 이은 세계 제3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1987년에는 소련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자, 당시 일본 수상이던 나까소네가 공개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신국가주의', '보통국가론'등을 내세우면서 군국주의 부활의 길을 걸어왔다.

군국주의 부활의 핵심은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헌법 제9조의 수정과 핵무장이다. 최근에 총리 직속 위원회의 보고서의 집단적 자유권은 교전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히 전쟁을 포기한 일본헌법 제9조의 수정을 의미한다. 헌법 제9조의 빗장이 풀리면 일본은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다.

그동안 일본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백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사들였다. 군국주의 부활의 준비는 끝난 것이다. 그런 일본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위험한 일이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장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동북아는 군비확장에 나서게 되어 우리나라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당장 한일군사보호협정을 폐기하고 한·일간에 존재하는 위안부문제 해결에 나서라.

한·일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현재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근로정신대 문제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 문제이다. 가능하면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싶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은 뻔뻔하게도 위안부 문제는 민간업자가 한일이고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다가, 후에 육군성업무일지, 각종 정부자료, 피해자의 증언 등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1992년에야 일본 정부가 한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한 일이라고 인정하는데 십수년이 걸렸다. 사죄와 배상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국제사회도 일본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여론이 높다.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도 과거 서독처럼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서독은 역대 총리들이 무릎을 꿇고 오체투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주변국과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했다. 정부가 한 일이니만큼 일본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처럼 민간의 모금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진솔한 사죄가 더 중요하다. 일본정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할 때에 주변국과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과거사는 묻지 않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는 한·일간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풀 수가 없다. 일본대사관에 차를 몰고 난입한 김창근씨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적극적으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선생님들, 체벌금지 핑계만 댈건가요?

한병선

"체벌보다 무서운 건 선생님의 무관심, 차라리 때려주세요." 한 일간지의 1면 기사 내용이다. 때려서라도 학생지도를 해야 한다는 요지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체벌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강원학생교육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에서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체벌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다.

행간(行間)을 읽을 필요가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차라리 때려달라는 의미는 아이들이 아프다는 내면의 표현이다. 그동안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다고 느꼈으면 그렇게까지 말하겠는가. 체벌의 긍정이 아닌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절규인 셈이다. 자신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우려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란 것,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읽어야 한다.

내용은 다시 교사들의 반응으로 이어진다. "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절차에 따라 등교정지나 전학을 시키면 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여기에 온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꾸중과 체벌이 관심이라면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반응이 상당히 자조적이다. 이제는 체벌할 수 없으니 규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묻어나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규정들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일반인이 아닌 학생들이란 점이다.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보내기 전에 교사들이 취했어야 할 선제적, 예방적 지도는 어디로 사라졌느냐다.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에 앞서 해야 할 조치들을 충분히 했느냐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문제가 터지면 학교 울타리 밖으로 학생들을 밀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누가 뭐래도 그건 아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들 스스로도 문제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체벌에 기대겠다는 생각이 아닌 심리적, 내면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의 가슴에 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다. 상처를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지도로는 결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체벌로 지도가 가능한 경우라면 굳이 체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뒤집어 말하면, 체벌을 해야 할 정도라면 체벌로는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란 것이다. 오히려 반감만을 키울 뿐이다.

이런 점에서 체벌금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무사안일(無事安逸), 즉 적극적인 선제적 개입이 없음을 탓하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체벌보다 무서운 건 선생님들의 무관심"이란 학생들의 말은 백번 옳다. 이는 체벌의 긍정이 아닌 교사들의 교직 부적성(不適性)을 드러내는 알레고리다. 체벌을 못하기 때문에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교직적성을 제대로 갖춘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평론가〉

범죄 수단 악용되는 대포폰 명의 대여 규제하자

대포폰이 무엇인지 다 알 것이다. 이게 여러 종류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활개치고 있으니 놀랍다.

대낮에 대포폰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각종 어린이 유괴, 강도,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데 왜 없어지지 않을까.

만약 어떤 유괴범이 내 아기를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와서 경찰이 추적을 했는데 그 전화가 대포폰이었다면 아마도 부모는 절망하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은 이런 유괴 말고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데 놀랍게도 작년에 1년간 대포폰을 통해 사기를 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자그마치 역대 최대인 880억 원이었다고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대포폰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즉 현재의 통신법에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접 대포폰을 이용해 사기나 유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가 수십만 원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을 이 대포폰 브로커에게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러 다니는 업자가 있고, 이 업자가 만들어 낸 대포폰 명의를 사서 사기꾼들에게 건네는 브로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악랄한 범법자들.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와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걸 막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현재 금융실명제를 통해 지하경제에서 흐르던 돈을 모두 양지로 끌어내서 경제정의를 실현한 것도 초기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정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대포폰을 만들 수 있는 빌미가 되는 명의 대여행위도 적절히 규제해야만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활개치고 있는 일도 줄이거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無等鼓

살라딘

드물게도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존경과 찬탄을 받고 있는 이슬람의 전설적 영웅이 바로 살라딘(Saladin·1138~1193)이다. 이라크 티크리트의 명망있는 쿠르드 족 가문에서 태어나 열네살에 군인의 길로 들어선 그는 탁월한 지략과 지혜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훗날 이집트와 시리아, 예멘, 이라크, 메카, 헤자즈 등지를 아우르는 거대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내며 이슬람 최고의 통치자인 술탄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살라딘은 그러나 막상 55세를 일기로 병마와 싸우다 죽었을 땐 변변한 재산이 없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가진 것을 거의 모두 어렵고 불쌍한 이웃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열어 본 술탄의 금고에는 티루스 디나르 한 잎과 은화 47디르함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집, 물건, 토지, 마을은 물론 어떤 종류의 사유재산도 남기지 않았다. 위대한 술탄은 거의 무일푼으로 숨을 거둔 것이다.

가족들은 무덤 만드는데 필요한 벽돌까지 돈을 빌려서 구입해야 했으며, 장례식 역시 걸인의 그것을 방불케 할 만큼 간소했다고 한다. 평범하고 투박한 목관에 담긴 시신은 대성통곡하는 군중의 벽을 지나 다마스쿠스 요새의 정원 정자에 매장됐으며, 그로부터 2년 후에야 예배당에 안치될 수 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국의 통치자는 거의 모두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사후를 대비해 거대한 무덤을 쌓아올렸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후세인을 비롯한 동서양의 독재자들은 전세계의 지탄을 아랑곳하지 않고 피묻은 재산을 쌓아올리는데 급급해왔다.

우리에게도 철권을 휘두르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군사정권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대기업을 운영하며 몰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기업인들에 대한 실망스런 경험이 적지 않다. 이슬람의 수장으로서 대제국 건설의 열정을 불태우면서도 개인적인 치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살라딘이 부러운 이유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